# 일본의 청년창업 정책

창업자의 적극적인 도전은 끊임없는 신진대사를 가져와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창업률이 폐업률을 하회하고, 특히 젊은 층의 낮은 도전정신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대학발 벤처 지원, 엔젤투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화함과 더불어 대학발 벤처 지원, 엔젤투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정 운영

일본은 기업가마인드 함양과 관련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1999년부터 중 · 고등학교 수업에 체험 · 참가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그 성공사례를 해당 자치단체 및 전국으로 확산시켜 학생들에게 장래 창업을 포함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고 체험하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지식 · 기술집약적인 창업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대학 · 대학원에서의 창업교육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2009년에‘ 대학 · 대학원기업가교육추진네트워크 ’를 설립하였다. 동 기구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업경험을 차세대에 전수하고자 하는 기업가, 창업 관련 외부 강사 등을 네트워크화하여 특히 지역에서의 기업가마인드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대학발 벤처창업 지원

지식과 혁신의 창출 거점인 대학은 기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과 함께, 대학의 지식 · 기술을 실용화 · 사업화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의 대학은 지역 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센터로서의 역할과 함께 산학협력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중추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대학발 벤처의 유형은 IPO[1]를 지향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일정 수

익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성장지향형 등 다양하다. 그렇지만 대학발 벤처는 창업 이후 제품화 과정에서 인력 확보,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일본은 해당 대학 출신 경영자 등을 활용한 경영자문,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인재교류와 그 인재의 연구 성과에 기인한 사업화 등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발 벤처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대부분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이지만 실제로 신시장 창출이나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학은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고객이나 시장의 평가를 높여주기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대학발 벤처기업에게 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내실있는 자금지원

일본 정부는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창업 예비자 및 창업 5년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엔젤투자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하고 있다. 즉, 창업 이후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엔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시점에서는 (출자액-2,000엔) 상당의 금액을 소득공제하며, 소득공제 상한액은 총소득액의 40% 또는 1,000만엔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청년창업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단계별로 차등화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에서의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및 교재를 교육단계별로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담당자의 확보 및 훌륭한 교육방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우수한 강사가 부족하다. 특히 지역에서 창업 강좌를 담당할 우수 강사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본과 같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 강좌를 담당하는 강사 등에 대한 DB 구축뿐만 아니라, 이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질 좋은 강의가 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청년창업 전용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엔젤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엔젤투자금액의 20%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에서 향후에는 일본과 같이 엔젤투자금액의 일정액(예: 상한 3,000만원) 또는 총소득금액의 40%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벤처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본과 같이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필요할 경우 기술·지식집약형 청년창업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대학 차원의 판로개척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기업들은 우수한 지식·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더라도 기업경영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경험이 일천하여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학 등에서의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과 같이 해당 대학의 동문 기업가를 활용한 경영지원과 함께 대학 차원에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명칭사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공개나 기업공개를 의미함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byangkiet@hanmail.net